

2022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

2022. 1. 25.

관 계 부 처 합 동

< 안건 요약 >

1. 추진배경 및 대외경제 여건 변화

- (추진배경) 범부처 역량 결집 통한 대외경제추진전략 수립 → '22년이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점**이 되도록 대외부문 총력 지원
- (대외경제 여건) 글로벌 경제 대전환 下 대외 불확실성 상존
 - ① '22년 회복세는 지속되나, 오미크론 확산, 공급망 병목, 각국 재정·통화정책 전환 등으로 **성장속도 다소 둔화 전망**
 - * 신흥·개도국의 더딘 백신 보급 등으로 선진국-개도국간 회복 불균형 심화
 - GDP 성장률 전망('21→'22, %, WB) : (선진국) 5.0 → 3.8, (개도국) 6.3 → 4.6
 - ② 공급망 재편, 지역화·블록화, 디지털·그린 등 **경제구조 대전환**
 - ③ 글로벌 경기회복 및 구조전환 과정에서 **국제공조 필요성 증대**
 - ④ 글로벌 인플레이, 美 통화정책 정상화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 심화**

2. 대외경제정책 세부 추진방안

◇ 4대 정책방향* + 10대 핵심과제 + 10대 성과목표^(※) 중심 총력 지원
* ①新시장 창출, ②새로운 대외경제질서 대응, ③국제협력 강화, ④국제금융 인프라 강화

① 新시장 창출 통한 경제회복 견인

- ① (FTA 네트워크 확대) 메가 FTA(CPTPP 가입 추진, RCEP 발효), 신흥국 중심 양자 FTA 확대 등 통해 경제영토 확장

☞ '22.4월중 CPTPP 가입신청서 제출

☞ 향후 FTA 네트워크의 전세계 GDP의 90% 확대('21년말 85.4%)

- ② (해외수주 지원) 금융지원(기본여신약정, 수은 특별계정, 대외채무보증 개선) 강화, 핵심프로젝트 관리, 제3국 공동진출 활성화 등 추진

☞ 3년 연속 해외수주 300억불 초과 달성

* 해외수주 실적(억불) : ('19) 223.3 → ('20) 351.3 → ('21) 306.2

- ③ (양자 경제협력) 지역·국가별 경제협력 목표·분야 구체화·추진

< 안전 요약 >

2 새로운 대외경제질서 대응

① (공급망 재편 대응) 양자·다자 협의* 활성화, 공급망 대응 역량 강화 및 추진기반 마련

* (다자) 글로벌 공급망 장관회의 등 대응, (양자) 對美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 지속, 對中 소통 지속

☞ 180개품목 수급안정화방안* 구체화 및 위기관리매뉴얼 운영 (1/4분기) 등 경제안보 핵심품목에 대한 위기 대응 강화

*20대 품목 既 마련('21.12월) + 나머지 180대 품목도 1/4분기 목표로 구체화

② (기술 육성·보호) 기술패권 경쟁 대응 위해 전략적 핵심기술을 육성·보호하고, 기술표준 선점 및 국제표준화 주도

☞ 전략적 가치 높은 중점기술 30~50개 선정* 등 기술 육성·보호 고도화

* 10개 국가필수전략기술별(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5G·6G, 첨단바이오 등) 3~5개 선정

③ (디지털·환경 등 대외협력) 디지털·환경·노동 기준 강화*에 대응하여 국내제도 개선 및 국제논의 적극 참여

* 디지털 통상, 탄소국경조정(CBAM), ESG 법제화, 노동규범과 통상정책 간 연계 등

- 디지털세 도입을 위해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 논의 참여, 다자협정 체결 및 고위급 서명식 진행

☞ DEPA*(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가입협상 타결

*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3개국 체결('21.1월 발효), 한국은 '21.10.5일 가입절차 공식 개시

3 국제협력 강화 통한 국익 제고

① (국제개발협력 강화) 수자원·전자정부·보건 등 우리 강점 분야 EDCF 지원 확대하고, 비구속성 비율 상향, 대형 PPP사업 발굴

- EBRD·AIIB와 신규 협력, 해외 개발금융기관과 협의체 신설 등 EDCF 협력채널을 확장하고, 선진국 수준의 개발금융기능 강화 추진

☞ 그린·디지털·보건 EDCF 21억불 지원 (전년 목표 대비 50% 확대)

☞ 해외 개발금융기관(美 DFC, 英 BII 등)과 EDCF 간 협력채널 구축

< 안건 요약 >

- ② (다자·국제금융기구 협력) G20 등 다자회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국제금융기구 협력을 통해 우리기업·인력 진출 확대
- G20 국제금융체제 공동의장국 수행, ASEAN+3 역내금융안전망 강화, OECD 동남아 프로그램 개최(2월) 등 국제협력 적극 주도
 - WB 사업설명회(2월)·채용미션(7월), ADB 백신생산 인력양성('22.上), IMF 빈곤감축기금 참여, CABI 韓사무소 개소 등 협력 확대

4 국제금융 인프라 강화

- ① (대외신인도 제고) 대외 리스크 모니터링 및 시장안정 노력을 강화하고, 해외투자자 적극 소통 등을 통해 대외신인도 제고
- 외환건전성 제도는 향후 시장여건 등 보아가며 정상화하고, 非은행권 모니터링 지표, 스트레스테스트 등도 본격 시행
 - 국제신평사 연례협의, 대면·비대면 IR 등 해외투자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외환보유액 등 대외건전성 지표 안정적 운용
- ② (외환거래 선진화 등) 외환거래 환경 변화 등에 대응하여 외환거래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
- 국내 개인·기업·금융기관의 외환거래 규제부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도록 현행 외환법령체계의 전면적 개편 추진
 - 국내 외환시장 거래시간 연장, 해외기관 국내시장 참여 등 외환시장 개선방안 검토 및 국내외 의견수렴 추진

👉 외국환거래법령개편안 연내 마련 등 외국환거래체계 선진화

👉 MSCI 선진지수 편입 추진 (6월 Watch list 등재)

3. 향후 추진계획

- 분야별 정책 추진실적은 연중 대외경제장관회의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통해 점검 예정('22.7월, 상반기 실적점검)

순 서

I. 추진 배경	1
II. 최근 대외경제 여건변화	2
III. 2021년 대외경제정책 평가	6
IV. 2022년 대외경제정책 기본방향	7
V. 세부 추진방안	9
1. 新시장 창출 통한 경제회복 견인	9
2. 새로운 대외경제질서 대응	18
3. 국제협력 강화 통한 국익 제고	26
4. 국제금융 인프라 강화	33
VI. 향후 추진 계획	37

I. 추진배경

□ 코로나19 이후 대외경제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변곡점 상황

- ① 최근 세계화·다자주의 기조가 둔화되면서 각국 이해관계에 따른 **자국 우선주의 및 블록화** 진행
 - **미·중 무역갈등** 지속,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 자유무역 기조 후퇴
 - **코로나19 영향**으로 필수 산업의 **자국 회귀(Reshoring)**, **공급망의 지역화(Regional Value Chain)*** 등 **공급망 재편 가속화**
- * (예) 미국, 캐나다, 멕시코 USMCA 발효('20.7월) → 자동차 등 북미 공급망 공고화
- ②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수요 급증,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 강화 등에 따라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구조적 대전환 본격화
- ③ 글로벌 이슈가 통상·투자 등 전통적 영역을 넘어 기술패권 경쟁, 공급망 재편, 노동·환경기준 강화 등 **경제·안보 결합 이슈**로 확대

⇒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는 **위기요인이자 기회요인**인 복합적 성격

- * (예) ①(위기)'19년 일본 수출규제 → (기회)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추진
②(위기)'21년 요소수 사태 → (기회)공급망 리스크 대응역량 강화 노력

□ 포스트코로나 대비 대외경제추진전략 보완·수립이 긴요한 시점

- **포스트코로나** 시대, 우리 경제의 도약(퀀텀점프)을 위해서는 대외경제 **기회요인 선점**과 **위험요인 선제 대비**가 관건
- 경제·안보가 통합·연계된 대외 현안에 대한 전략적·정무적 판단을 위해 **부처 간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업체계** 구축 필요

☞ **범부처 역량 결집**을 통한 대외경제추진전략 수립을 통해 '22년이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점**이 되도록 대외부문 총력 지원

Ⅱ. 최근 대외경제 여건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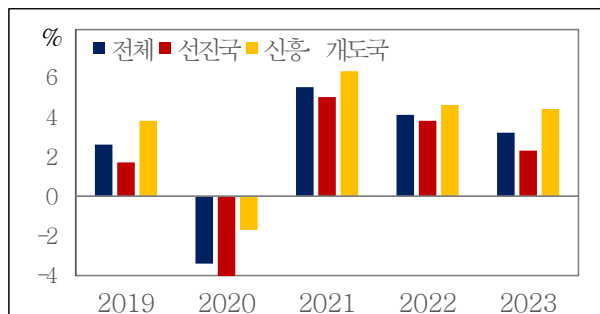
① 글로벌 경제성장	② 경제구조 대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약조건 하 세계경제 회복세 다소 둔화 • 선진국-개도국간 회복 불균형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망 안정성 중시, 지역화 · 블록화 • 디지털 · 그린 경제로 전환
글로벌 경제 대전환 대외경제 불확실성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경쟁과 협력의 방식 전환 • 개도국 회복 지원, 디지털·그린 대전환 과정에서의 국제공조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인플레 장기화 •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③ 글로벌 협력시스템	④ 글로벌 금융시장

① 글로벌 경제 **회복세 다소 둔화**, 선진-개도국간 **불균형 회복 심화**

- '21년 글로벌 경제는 백신 보급 및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으로 강한 회복세를 보였으나, 하반기 경제 하방요인 다수 등장
 - 오미크론 확산, 공급망 병목 현상*, 각국의 재정·통화 정책 전환 등으로, '22년 **회복세는 지속되나 성장 속도 다소 둔화 전망**
- * 美 셰일가스·석유 보조금 축소 등 탈탄소 기조, 신흥국 코로나 봉쇄, 코로나 이후 소비자 수요패턴 변화(서비스→재화) 등으로 '22년에도 공급망 병목현상 지속 가능성
- '22년 **선진국 경제 중심**으로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 기대
 - 다만, 신흥·개도국의 더딘 백신 보급, 팬데믹으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락 여파 등으로 **선진국-개도국간 회복 불균형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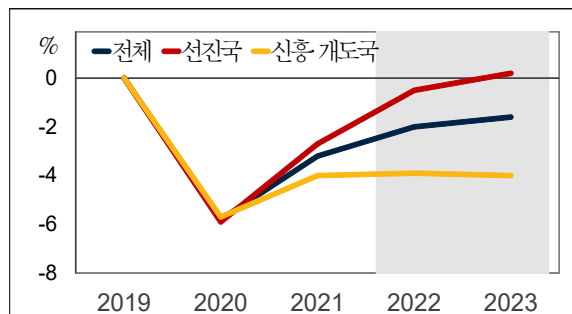
* GDP 성장률 전망(% , WB) : (선진국) '21년 5.0 → '22년 3.8
(신흥·개도국) '21년 6.3 → '22년 4.6

연도별 경제 성장률 추이 및 전망



* 출처 : World Bank

팬데믹 이전 GDP 추세로부터 이탈 수준



* 출처 : World Bank

② 공급망 재편, 블록화, 디지털·그린 등 글로벌 경제구조 대전환

① (효율적 → 안정적 공급망) 팬데믹을 계기로 공급망의 회복탄력성 강조

- '90년대 무역 자유화 진전 이후 공급망의 효율성을 중시하는 「**적시 공급체계(JIT: Just in time)**」 확산으로 글로벌 가치사슬(GVC) 발달*

* 세계 교역량(조불): ('90년)6.9→('00년)13.0→('10년)30.5→('20년)**34.9**

** 세계 GVC 참여율(% , 무역협회): ('00년)45.6 → ('10년)50.3 → ('15년)51.9 → ('17년)**52.9**

- 최근, 일부 지역·품목의 불안요인이 전체 공급망의 생산 차질*을 초래하면서 「**만약에 대비하는 공급체계(JIC: Just in case)**」 대두

* 미텍사스 한파('21.2월): 전력중단에 따른 공장가동 차질로 전세계 반도체 공급에 악영향
日반도체 공장 화재('21.3월): 차량용반도체 공장 화재로 전세계 차량용반도체 공급여건 악화
泰대규모 홍수('11.3월): 자동차·컴퓨터 부품 산업단지 침수로 자동차·전자 산업 피해

② (세계화 → 블록화) 경제효율과 국제분업보다는 '경제안보' 중시로 과거의 세계화 기조에서 **지역화·블록화** 및 **자국 우선주의**로 전환

- 안보, 가치, 무역, 경제적 이익 등에 따라 **美中간 패권경쟁*** 및 EU-러 대립 등 갈등이 심화되고, 경쟁국은 공급망에서 배제 시도**

* 美 중간선거(11월), 中 시진핑 3연임 확정(10~11월) 등 감안시 美中간 갈등 심화 예상

** 전략물자 관리 강화와 함께 핵심품목에 대한 동맹국간 협력 등으로 자원블록화(blocization) → 주요품목 경제무기화

- 글로벌 공급사슬(GVC)의 훼손과 재편이 진행되고, 통상에 노동·환경 이슈가 결합되는 등 종전과 다른 양상으로 전개

③ (디지털·그린 경제로 전환) 팬데믹으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기후변화 대응 시급성으로 탄소중립 경제로 전환 촉진

- 전자상거래 무역 및 국경 간 디지털 상품·서비스 거래 급증 下 美·日 등은 디지털 경제 선도를 위해 **양자·지역간 협정 체결***

* USMCA(미·멕시코, '20.7월 발효), 미·일 디지털무역협정('20.1월 발효), DEPA(싱·뉴·칠, '21.1월 발효),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21.12월 타결) 등

- 그린산업 급성장, 석탄발전 폐지 등 에너지원 전환 진행 가운데 탄소국경조정, 금융공시 등 **기후목표 이행***을 위한 논의 본격화

* 탄소중립 선언: (EU) '19.12월 (中) '20.9월 (韓) '20.10월 (日) '20.10월 (美) '20.11월

3 글로벌 경기회복 및 구조전환 과정에서 국제공조 필요성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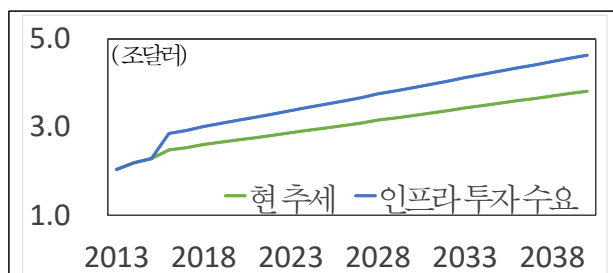
- 디지털·그린 경제로 전환, 인프라 투자 수요 확대*로 개도국 개발수요는 급증한 반면, SDGs 달성을 위한 글로벌 투자 위축

* '40년까지 글로벌 인프라 투자 부족액 15조불로 추정('21.9월, Global Infrastructure Hub)

- 우리가 강점이 있는 보건, 디지털, 그린 수요 확대*는 기회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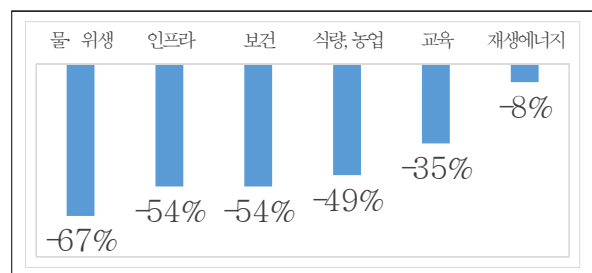
* 개도국 정부시스템 디지털화에 따른 부가가치는 0.22 ~ 0.32조불로 추산(IMF)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30년까지 5.8조불 소요 전망('21.10월, UN기후변화협약)

글로벌 인프라 투자 갭



* 출처 : Global Infrastructure Hub

팬데믹에 따른 SDG 투자 감소(20년 전년대비)



* 출처 : UNCTAD

- 美, EU는 對개도국 영향력 확대*, 인프라 투자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발금융기관(DFI)을 신설·강화하고 전략적 활용 및 협력체계 구축**

* 美 B3W(Build Back Better World), 中 일대일로, EU Global Gateway 등

** 美 DFC-EU EDFI-加 Findev는 'DFI Alliance' 결성('19.4월), 사업발굴·투자 등 활발히 협력 중

※ 개발금융기관(DFI, 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s): 순수 민간투자가 부족한 개도국 민간기업·프로젝트에 대출, 투자, 보증 등 다양한 개발금융을 지원하는 공공금융기관

• 예시: 美 DFC('19년 설립), 加 Findev('19년 설립), 英 BII('48년 CDC로 설립, '22년 명칭변경 등 개편), 佛 Proparco('77년 설립), 獨 DEG('62년 설립), 네덜란드 FMO('70년 설립) 등 17개

- 백신 공급 격차, 재정 여건 차이 등으로 선진국-개도국간 경제회복 격차가 발생함에 따라 국제공조 필요성 증대*

* 저소득국 유동성 위기 완화를 위한 채무 상환유예·조정, 디지털·그린 구조전환 등

- 국제사회는 국제금융기구 자금 추가 배정* 등을 통해 기존의 위기 대응 중심에서 미래 대비 지원으로 노선 전환 중

* MDB의 코로나19 대응 지원규모: 850억불 → 3,280억불(+2,430억불, 예정액 포함)

- 국제사회는 우리나라의 높아진 소프트 파워에 걸맞은 역할 기대 및 우리 강점 분야에 대한 기술지원·지식공유* 등 지속 요청 중

* 전염병 대응 시스템, 스마트 시티, 수자원 관리, 원격교육 등

4 글로벌 인플레이, 美 통화정책 정상화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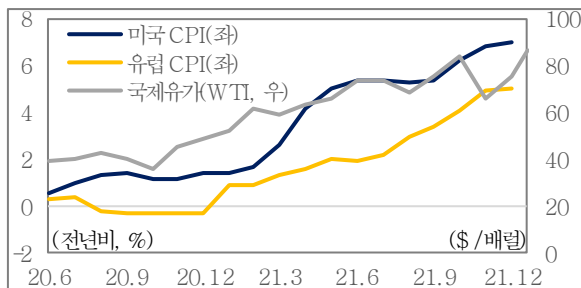
- 당초 일시적일 것으로 예상되었던 **글로벌 인플레이**가 노동공급 부족, 공급망 차질 등으로 **장기화**되는 양상*

* '21.12월 FOMC 성명서에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transitory)이라는 표현 삭제

- **오미크론 확산** 및 **각국 제한조치** 등으로 **공급 차질**이 심화되며 **인플레이션 상방 요인**으로 지속 작용할 우려도 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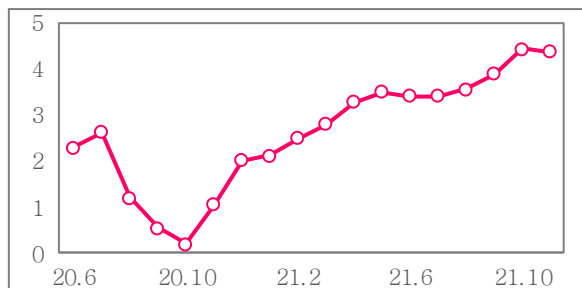
* 특히, 최근 中 오미크론 확산 및 제로 코로나 정책이 글로벌 공급망 타격 소지

주요국 CPI 및 국제유가



* 출처 : Bloomberg

글로벌 공급망 압력 지수



* 출처 :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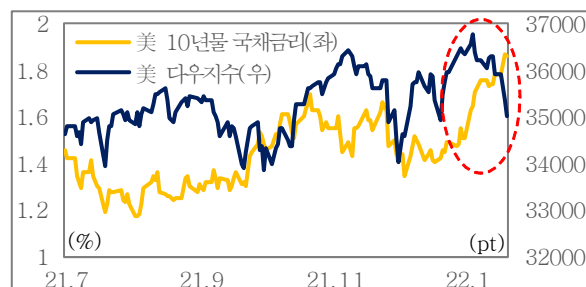
- 인플레이션 장기화로 美 등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가 예상보다 빨라지면서 **금리·주가*** 등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 1.19일(연초비) : (美 국채금리, 10년물)23.7bp (2년물)28.9bp (다우)△4.3% (나스닥)△9.4%

- 美 연준이 3월부터 3차례 이상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대차대조표 축소도 예상보다 **가속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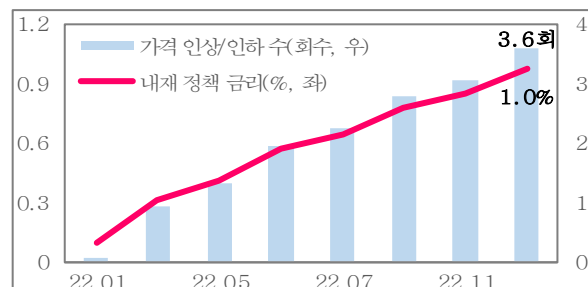
* FOMC 의사록(1.5일) : 대부분 위원들이 B/S 축소가 과거보다 빨라져야 한다고 공감

美 국채금리·주가지수



* 출처 : Bloomberg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 금리인상 기대



* 출처 : Bloomberg

- **중국 부동산 개발기업 디폴트**,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관련 러시아·유럽 갈등**, **이란 핵 문제** 등 여타 리스크 상존

Ⅲ. 2021년 대외경제정책 평가

□ [성과] 대외부문이 과거 위기와 달리 경기회복 견인 대외 안정성 향상

- 글로벌 경기·교역 개선 흐름에 더해, 수출금융*, 수출물류 및 기업인 이동 애로 해소**, 해외수주 지원 등 전방위 정책적 노력

* 수출금융(조원) : ('18) 205 → ('19) 217 → ('20) 240.5 → ('21) 255.8

** (물류) 임시선박 86회(화물 19.8만TEU, '20.8월~), (이동) 격리면제 5.3만건

- 수출·무역규모 역대 최고치 경신* 및 2년 연속 해외수주 300억불 초과 달성** 등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뒷받침

* ('21년 수출액) 6,445억불 <종전 최대 '18년 6,049억불>,
('21년 무역규모) 1조 2,596억불 <종전 최대 '18년 1조 1,401억불>

** 수주액(억불) : ('16) 282 ('17) 290 ('18) 321 ('19) 223 ('20) 351 ('21) 306

- 외환부문 안정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대외건전성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실물 회복을 적극 지원

* CDS프리미엄 '08년 이후 최저('21.8월 17bp), 국가신용등급 역대 최고(AA) 유지, 외환보유액 사상 최대('21.10월말 4,692억불) 등 성과

- 공급망, 기술 육성·보호, 인프라협력 등 경제·안보가 결합된 이슈에 대해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21.10월 출범) 통해 적극 대응

* ①美 반도체 정보 제공요청 관련 대응, ②기술패권 경쟁 하 우리기술 육성·보호 전략, ③산업용 요소·요소수 수급현황 및 대응방안, ④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대응전략 등 논의

□ [향후 과제] 공급망 리스크 관리 및 경제안보 대응

- 그간 우리 경제는 단기비용 절감을 최우선 고려한 공급망 구축으로 특정국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고 공급충격에 취약

* 전체 수입품목 중 특정국가 高의존 품목(50% 이상)은 4,000여개

⇒ 공급망 다변화(특정국 의존도↓) 및 리스크 대응역량 강화 필요

- 미중갈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특정 경제블록 참여 요구 증대

⇒ 경제안보 관점에서 보다 치밀한 범부처 전략적 대응 필요

IV. 2022년 대외경제정책 기본방향

3대 정책 목표

완전한 경제회복
선도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명실상부한 선진경제로
자리매김

정책 방향 및 과제

4대 정책방향

新시장 창출 통한
경제회복 견인

새로운
대외경제질서 대응

국제협력 강화 통한
국익 제고

국제금융 인프라
강화

10대 핵심과제

- ① FTA 네트워크 확대
- ② 해외수주 지원 강화
- ③ 양자 경제협력 고도화

- ①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 ② 기술패권 下 우리기술 육성·보호
- ③ 디지털·환경·노동 기준 강화 대응
및 대외협력

- ① 국제개발협력 강화
- ② 다자·국제금융기구 협력

- ① 대외신인도 안정성 제고
- ② 외환거래제도 선진화 및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

'22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 10대 성과 목표

- 1. 180개품목 수급안정화방안 구체화 및 위기관리매뉴얼 운영(1/4분기) 등 경제안보 핵심품목에 대한 위기 대응 강화**
 - * ①20대 품목 既 마련('21.12월) + 나머지 180대 품목도 1/4분기 목표로 구체화
 - ②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영 → 위기에 대비한 대응체계 사전 구축
 - ③조기경보시스템(Early Warning System) 고도화
- 2. 전략적 가치가 높은 중점기술 30~50개 선정* 등 전략적 핵심기술 육성·보호정책 고도화**
 - * 10개 국가필수전략기술(①반도체·디스플레이, ②이차전지, ③5G·6G, ④첨단바이오, ⑤양자, ⑥우주·항공, ⑦인공지능, ⑧수소, ⑨사이버보안, ⑩첨단로봇·제조) 분야별 3~5개의 세부중점기술 선정
- 3. '22.4월중 CPTPP 가입신청서 제출***
 - * '22.4월 가입신청을 목표로 사회적 논의, 회원국 협의 등 관련 절차 진행
- 4. 메가 FTA (CPTPP, RCEP) 및 양자 FTA 적극 추진을 통해 향후 FTA 네트워크의 전세계 GDP의 90% 확대('21年末 85.4%)**
- 5. DEPA*(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가입협상 타결**
 - * 디지털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3개국이 체결한 협정('21.1월 발효), 한국은 '21.10.5일 DEPA 가입절차 공식 개시
- 6. 3년 연속 해외수주 300억불 초과 달성**
 - * 해외수주 실적(억불) : ('19) 223.3 → ('20) 351.3 → ('21) 306.2
- 7. 그린·디지털·보건 EDCF 21억불 지원(전년 목표 대비 50% 확대)**
 - * EDCF 승인목표('21→'22) : (그린) 3→8억불, (디지털) 5→6억불, (보건) 6→7억불
- 8. 해외 개발금융기관(DFI)*과 EDCF 간 협력채널 구축**
 - * (예) 美 DFC(D_evelopment F_inance C_orporation), 英 BII(B_ritish I_nternational I_nvestment) 등
- 9. 외국환거래법령개편안 연내 마련 등 외국환거래체계 선진화**
- 10. MSCI 선진지수 편입 추진 (6월 Watch list 등재)**

V. 세부 추진방안

1

新시장 창출 통한 경제회복 견인

- ◆ **메가 FTA(RCEP, CPTPP), 양자 FTA** 등 네트워크 확대 통해 **경제영토 확장**
- ◆ **해외수주 3년 연속 300억불 초과 달성**을 위해 **금융지원 강화, 핵심프로젝트 관리, 한-미/한-중 공동진출 활성화** 등 기반 확충
- ◆ 지역·국가별 **경제협력 목표·분야**를 구체화, **양자 경험 체계적 추진**

1. FTA 네트워크 확대

1 CPTPP 등 메가 FTA 추진을 통한 아태지역 경제·교역 확대

- ① **(CPTPP*) '22.4월 가입신청을 목표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우호국 공조 등을 비롯한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

*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일본·호주·싱가포르 등 아태지역 11개국이 참여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대내) 지역순회 간담회, 업종별 협의회 등 충분한 사회적 논의, 농수산업·중소제조업 등 민감분야 보완대책* 방향 선제적 검토

* 국내 산업 보완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 TF 구성·운영 중('21.12.20~)

- (대외) 싱가포르(의장국), 뉴질랜드 등 주요 회원국과 지속 협의하여 CPTPP 회원국내 우호적 가입환경 조성

< 신규가입 관련 프로세스 >



② (RCEP*) '22.2.1일 발효 예정인 세계 최대 메가 FTA RCEP의 원활한 이행을 통해 역내 교역 다변화 및 신남방정책 연계 강화

*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SEAN 10개국 및 5개국(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민관합동 설명회 등을 통해 우리 업계의 RCEP 활용도 제고, RCEP 공동위원회*(22.1분기, 잠정) 등 계기, 공동 협력분야 발굴·참여

* 발효일로부터 1년 내 첫 회의 소집('22년 인도네시아·뉴질랜드 공동 의장)

② **신흥국 중심의 FTA 확대 및 既 체결 FTA 개선 등 FTA 효과 제고**

① (신규 FTA) 신흥시장 주요국 FTA 확대를 통해 공급망 안정화 및 기업 진출기반 확대

< 신규 FTA 추진현황 및 계획 >

대상 국가		추진 현황	'22년 계획
신남방	필리핀	• 양국 FTA 타결('21.10.26)	• 양국 서명식 추진('22.下)
	캄보디아	• 양국 FTA 서명('21.10.26)	• 비준동의안 제출('22.上)
	인도네시아	• FTA 국내 비준절차 완료('21.6.29)	• 인니측 절차 완료시 조기 발효 추진
신북방	우즈베크	• 제2차 무역협정 협상('21.11.22~23)	• 주요쟁점에 대한 이견조율
	러시아	• 서비스투자 FTA 제5차 협상('20.6)	• 협상 모멘텀 관리
	EAEU	• FTA 공동 실무작업반 설치 합의('17.9)	• 개별 회원국 접촉을 통해 논의 개시 여건 마련
중남미	멕시코	• FTA 제2차 협상('08.6)	• 연내 협상 재개 추진
	중미	• FTA 전체 발효('21.3.1) * 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19), 엘살바도르('20), 파나마('21)	• 과테말라 추가 가입 추진
	태평양동맹	• 준회원국 가입 협상 시행세칙 합의('20.12)	• 협상개시 논의 진전
	메르코수르	• 제7차 무역협정 협상('21.8.30~9.3)	• 협상 진전
중동·아프리카	이집트	• 공동연구 MoU 체결('22.1.20)	• 공동연구 개시('22.上)
	걸프협력회의	• 제3차 FTA 협상('09.7)	• 협상 진전 및 조속한 타결 노력
	UAE	• 시행세칙 합의('21.9.20) 협상 추진 선언('21.10.14)	• 실무협의 지속하며 GCC FTA 협상지연시 CEPA 협상 추진
	이스라엘	• 양국 FTA 서명('21.5.12)	• 비준동의·발효('22.上)

② (FTA 개선·활용) 既 체결 FTA 개선 및 FTA 협의 채널(공동위 등) 활용 등을 통해 디지털*·환경** 등 新통상이슈 협력 강화

* 한-아세안 FTA 개선방안 공동연구(~22.7) 등을 활용하여 디지털협력 강화방안 모색

** 한-호주 FTA 공동위('22.上) 등을 계기로, 기후변화, 신재생에너지 등 협력 확대방안 논의

2. 해외수주 지원 강화

① 금융지원 강화를 통한 유망분야·新시장 수주기반 확충

① (기본여신약정*) UAE·사우디 국영석유회사와 수은간 기본여신 약정(F/A) 체결을 통해 수소 등 유망분야 수주 및 투자 촉진

* 여신 한도 등 주요조건을 사전에 약정하고 추후 개별 거래시 신속한 금융제공

- 수은-UAE ADNOC간 50억불 규모 F/A('21.1월 既체결)을 활용, 향후 GS에너지 블루암모니아 사업* 및 韓 석유공사-ADNOC 블루암모니아 시범도입 계약 체결에 따른 후속 협력사업 금융지원 추진

* 총사업비 50~100억불 추정, '21.11월 GS에너지 공동투자자 참여 결정

- 수은-사우디 Aramco간 상반기중 60억불 규모 F/A 체결* 추진

* '22.1월 수은-Aramco간 F/A의 주요조건 합의서 既 체결

- F/A를 활용하여 '22.1월 Aramco-우리기업 MOU 체결에 따른 향후 수소·에너지분야 후속 협력사업 금융지원 추진

< '22.1월 한-사우디 수소·에너지분야 협력 MOU 체결 현황 >

- '22.1.18 사우디 리야드에서 개최된 '스마트 혁신성장 포럼'을 통해 한-사우디간 수소·에너지분야 협력을 위한 9건의 MOU 체결
 - (Aramco-S-oil) TC2C(원유·석유→화학물질 전환) 프로젝트 실행 협력 MOU, 수소공급망 협력 MOU 등
 - (Aramco-한국전력) 수소·암모니아 협력 MOU
 - (Aramco-수소융합얼라이언스) 양국 수소 관련 협력 확대 MOU

- 두산중공업-Aramco-Dussur(사우디 산업투자공사)간 합작사 설립 및 주단조 공장 건설 프로젝트 관련 금융지원 추진

② (수은 특별계정*) 특별계정 2단계 추진을 통해 정책금융의 사각 지대 해소 및 발주잠재력이 높은 新수주시장 선점 노력 강화

* 국가신용도 낮아(B+이하) 수은 일반계정으로 지원 곤란한 低신용국의 인프라 사업 수주 지원을 위해 수은 특별계정 신설('19~'21, 1조원) 및 확대('22년~, 1조원)

③ (대외채무보증 개선) 금융지원 경쟁력 제고를 통한 해외수주 확대를 위해 수은 대외채무보증 제한 완화* (수은법 시행령 개정)

- * ①총액제한: 총액제한 비율 상향(35→50%) 및 총액기준 개선(당해연도→3개년 평균)
- ②건별제한: 보증과 대출의 탄력적 조합이 가능하도록 건별제한 적용 배제 거래 신설

2 고부가 투자개발사업으로의 수주 전환 본격화

- ① **(공기업 PPP 플랫폼 지원)** 주요 인프라 공기업별 해외사업 플랫폼 강화 지원* 및 분기별 점검·관리를 통해 PPP사업 진출 확대 유도

* 공기업-MDB간 정기적 교류를 추진하고, 사업별 개발·투자 협력 강화

- ② **(투자방안 다양화)** 분야별(도로·철도·공항) 시장진입 전략으로서 시공 후 운영단계 사업에 대한 지분투자, 분야별 O&M 사업 진출

- ③ **(제도개선 이행)** 공기업의 투자개발사업 수주 촉진을 위한 인사·예타 등 제도개선* 본격 이행

* (인사) 해외사업 전문직위 운영 및 장기계약 수주시 참여인력 정원 반영
(예타) MDB 참여사업 등 예타평가지 우대, 신속예타 실효성 제고, 예비협의 신설 등

3 폴란드 원전 등 핵심 프로젝트 추가발굴 및 중점관리

- ① **(폴란드 원전(약 400억불)*)**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하고 제안서 제출('22.3월)

* 폴 정부는 '43년까지 총 6기 원전건설 계획, 사업비의 최대 49%를 공급자가 조달하는 조건 하에 美·佛·韓과 사업 협의중

** 정부(기재부·산업부), 금융기관(수은·무보), 한수원간 재원조달방안 등 협의

- ② **(G2G 협력 프로젝트)** 파라과이 경전철사업 협력 MOU('21.9월), 폴란드 신공항 개발 협력 MOU('21.12월) 등을 통한 수주 적극 지원

* KIND, 인프라 공기업 등 Developer 역할 및 전문성 활용 민간 합동 진출

- ③ **(정책자문의 실질 사업화)** KSP* 등 정책자문 사업을 구체적인 프로젝트로 심화·발전시켜 우리기업 해외진출을 지원

* **K**nowledge **S**haring **P**rogram, 경제발전경험을 토대로 협력국 맞춤형 정책자문 제공

- **(페루)** 선박제조시설 현대화전략자문('19, KSP) → 국영조선소 확장·현대화 F/S(해수부, '20-21)
- **(온두라스)** 전력공급 개선 자문('19, KSP) → 송배전 현대화 F/S(산업기술진흥원, '20-21)
- **(케냐)** 콘자 디지털미디어시티 조성자문('18, KSP) → 경험증진자금(EDPF) F/S('20-22)

4 제3국 공동진출 활성화를 위한 美·中 G2G 인프라 협력 강화

① (미국) 인태지역 등 제3국 공동진출에 기반한 협력사업 적극 발굴

- 기후(신재생에너지), 디지털 등 유망분야 제3국(인태지역 등) 공동 진출을 위한 제2차 한미 인프라 民官 라운드테이블* 개최('22.上)

* 양국 정부(美 국무부·재무부, 韓 기재부·외교부) 및 기업(건설, 금융 등) 참여

- 인도·아세안 지역 인프라 개발 지원시 EDCF·EDPF*의 강점을 활용, 美 DFC와의 연계프로젝트 발굴 등 개발금융 협력 강구

* EDCF : (금리) 0.05~1.3%, (상환·거치)12~40년·5~15년 / EDPF : 금리 2~3%

② (중국) 민간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수교 30주년 계기 교류 활성화를 통해 제3국 공동진출 기반 강화

- 「한·중 해외건설 협력포럼*」 한국 개최, 제3국 지역 내 양국 기업 교류행사(재외공관 및 코트라 활용) 등 민간 네트워크 강화

* 주최 : 韓국토부-中상무부 참여 / 주관 : 韓해외건설협회-中대외승포공정상회
개최현황 : (1차) 마카오, (2차) 중난창시, (3차) 마카오, (4차) 화상(서울-베이징)

- 제3국 대형 프로젝트의 공동 발굴·기획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

* (예시) 韓 : KIND, 수은, KOTRA, 무보 등 / 中 : COIDIC(해외인프라개발지원기구), 中수은 등

3. 양자 경제협력 고도화

① (미국) 5대 분야 협력 확대 지속

○ (협력분야) 韓美 정상회담('21.5월)에서 합의한 5대 분야 협력 강화

① (공급망) 협력 프로젝트 발굴 및 공급망 공동 분석, 對美 투자 우리 기업에 대한 美 정부 지원* 협의 등을 위해 韓美 산업협력대화*(22), 고위급 경제대화(22.下) 등 개최

* 美의회 입법동향 (반도체) 혁신경쟁법('21.6 상원 통과) 내 반도체 투자 지원 예산안(520억불) 포함 (배터리) 인프라일자리법('21.11 입법완료) 내 배터리 제조재활용 등(60억불) 포함

② (첨단기술) 韓美 과학기술공동위원회(22.下), ICT 정책포럼 사전회의(22.下) 등을 통해 우주양자기술 반도체·6G·바이오 등 신흥기술 분야 기술개발* 및 표준화 협력 강화**

* 신흥기술 협력 MOU 체결, 공동연구 신규 추진·확대 등 ** 국제표준화기구 공동 대응 등

③ (백신 협력) 인력교류 확대, 공급 불안정 발생시 원활한 협조 등을 위한 '韓美 전문가그룹 회의*(22.上) 개최 등 정부·기업·연구기관 간 공동연구·협력 활성화**

* 韓 복지부 - 美 보건부, 연구기관 등

** '21.9월 "韓美 백신협력 협약 체결식"에서 기업간·연구기관간 협력 MOU 체결

④ (기후변화 대응) 美 주도 다자 논의* 참여, 韓美 에너지 정책대화**(22.上 잠정), 제4차 韓美 환경협력위원회 등을 통해 양국 협력사업 지원

* 에너지·기후 관련 주요국 정상회의(MEF, '22.4월), 글로벌 메탄서약 장관회의 등

** ①정책, ②기술, ③상용화 3개 분과로 구성·운영하여 양국 경제 탈탄소화 지원

⑤ (신남방-인태 연계협력) 양국의 강점(韓 건설운영, 美 금융)을 활용한 공동진출확대*, 메콩지역 개발** 등 수자원 관리분야 협력 지속, 개발협력 공동사업 발굴 확대 등

* 베트남 호치민 신공항 사업 한·미 컨소시엄 입찰 참여 준비, ▲신남방국가 내 인프라 시장 공동진출 및 인프라 금융(financing) 확대 추진 등

** 메콩지역 수자원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 사업(韓 K-water-美 NASA 및 공병단) 등

② (중국) 3대 협력 모멘텀*을 활용하여 문화·산업 협력 강화

* 한중 수교 30주년, '21~'21년 한중 문화교류의 해, 베이징 동계 올림픽 등

① (협력채널)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거시경제 정책 교류 및 경제 현안에 대한 협력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

② (협력분야) 한중 수교 30주년 계기, 문화 교류 활성화 및 산업 협력

- (문화) 문화교류의 해, 동계 올림픽 등 계기 문화·관광 분야 소통 채널을 활성화
- (산업) 한중이 공동 조성한 경제협력 특구*의 활성화를 위해 양국 정부간 정책적 지원 방안(특구 입주기업 지원 등) 논의 본격화

* (韓)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단지, (中) 장춘시 국제협력시범구 등

③ [신북방] 에너지·희소자원 분야 및 인프라 협력 강화

① (러시아) 「9개다리 행동계획 2.0」에 따라 인프라, 투자, 보건 분야 등 협력 성과 견인, 수소에너지 등 新산업 협력 확대

- (인프라) 연해주산단 기업활동약정 체결('22.上), (투자) 한-러펀드 운용조건 확정('22.上), (보건) 우리 의료기관 러시아 진출 협의 지속, 극동 eHealth 마스터플랜 이행 협의, (조선) 인적·기술교류 및 공동건조 수주 지원, (수소) 수소 모빌리티 MoU 추진

☞ 제20차 한-러시아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22.上, 한국)

② (우즈베크) 스마트시티, 보건의료 분야 등 우리 강점분야 ODA 협력 지속 추진, 수주 지원을 통한 기업 진출 확대

- (ODA) 안그렌市 스마트시티(EIPP 수행중) 및 제약클러스터·의과대학 등 EDCF 지원 검토
- (수주) 화력발전소 현대화, 고속도로 등 인프라 사업에 우리 기업 참여 지원
- (자원협력) 한-우 희소금속센터('19上 개소)를 거점으로 첨단산업용 소재부품 생산기술 공동개발을 가속화하여 공급망 측면 협력 확대

☞ 제4차 한-우즈베크 경제부총리회의 개최('22.上, 우즈베키스탄)

③ (카자흐) 희소금속 자원, 교통인프라 등 분야 협력

- (희소금속) 우라늄, 베릴륨 등 광물 공급 협력 추진
- (교통인프라) 알마티 순환도로 건설('20년 착공, '24년 완공 예정) 지속 추진

4 [신남방] 원자재 등 공급망 협력 및 기술·금융 공조 강화

① (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아 다방면 실질협력 강화

- (공급망) 요소 수입 다변화('21.12월 MOU 체결) 등 공급망 리스크 관리 공조
 - (보건) 백신생산 투자(ADB 협력), 질병예방관리시스템 구축(EDCF 활용) 등 협력
 - (인프라) 흥이엔성 산단 조성('22.上~), 대형 인프라(LNG발전, 지하철 등) 수주 지원
- ☞ 경제부총리회의(‘22.上), 보건장관회의(‘22.上), 산업·FTA 공동위원회(‘22.4분기) 등 개최

② (인니) 요소·전기차 등 공급망 협력 및 G2G 정책자문 성과 창출

- (공급망) 요소 수입 다변화('21.12월 MOU 체결), 전기차·배터리 투자 등 공급망 협력
 - (정책자문·인프라) 수도이전 관련 G2G 자문(K-City Network, EIPP*)의 후속연계 추진, 카리안 광역상수도 사업 착공('22.5월) 등
- * 경제혁신파트너십프로그램(EIPP, Economic Innovation Partnership Program): 대형 인프라 등 기회 선점을 위한 G2G 차원의 심화된(매년 5건) 중장기(3년 이상) 정책자문 프로그램

③ (인도) 경협채널 활성화를 통한 교역·투자 모멘텀 강화

- (인프라) 인도 최초 차관사업(EDCF: 나그푸르-मुंबई 고속도로 ITS 구축) 승인('21.11월)을 계기로 ICT·교통 분야 진출 활로 개척 및 대규모 프로젝트 추가 발굴
- ☞ 통상장관 회담('22.1월), 과학기술공동위원회('22.4분기 잠정) 등 고위급 대화 재개

④ (ASEAN) 기술협력을 위한 산업혁신기구·표준화연구센터 설립 추진, 금융협력센터*를 중심으로 금융기관 진출 지원

* 금융기관 진출 인허가, 외국계 은행에 대한 규제개선 등 지원('21.8월~ 운영)

5 [기타] 지역별 구체적인 협력목표·분야 중심으로 체계적 추진

① (일본) 에너지·환경 등 공통 경제현안에 대한 실질협력 추진

- (공통 정책 현안)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협력, 기후변화·해양 쓰레기 등 환경문제 대응, 저출산·고령화 등 양국 공통 현안 협력
 - (인적교류) 한·일 구인·구직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여 한국의 구직난, 일본의 구인난 극복을 위한 인적 교류 활성화 방안 협의
- ☞ 여건 성숙시 '16년 이후 중단된 한일 재무장관회의 재개

② (중동) 에너지, 신산업(스마트시티·신재생에너지·보건 등) 미래 협력 강화

- (UAE) 수출금융 지원(수은-UAE ADNOC 간 기본여신약정 체결, '22.1월) 등을 통한 신재생에너지(수소 등) 협력 확대, CEPA 협상을 통한 교역·투자 활성화
☞ 제8차 한-UAE 경제공동위 개최('22.下, 한국)
- (쿠웨이트) 스마트시티(압둘라 스마트시티)·스마트팜 등 인프라·디지털 협력, 우리 병원 시스템 및 의료기관 진출 등 보건의료 협력 확대
- (사우디) 수출금융 지원(수은-사우디 Aramco 간 기본여신약정 체결 예정) 등 신재생에너지(수소 등) 협력, 제조·기술 분야 등 협력 다각화, 한-GCC FTA 재개
- (이란) 이란 핵합의 복원 협상 진행에 따른 미국의 對이란 제재 완화시 교역·수주·기업 진출 지원방안 점검
- (이집트) 대통령 방문('22.1월) 계기 EDCF 지원한도 확대(7→10억불), 철도현대화 사업 시행약정 등 체결 → 교통 및 친환경에너지·공공행정·교육 분야 협력 확대

③ (유럽) 통상 패러다임 전환에 맞춰 기술·디지털* 등 집중 협력

- (기술 협력) EUREKA, Horizon Europe 등 플랫폼을 통한 한-EU 기술협력 강화
- (디지털 통상) 한-EU 디지털 파트너십(Digital Partnership) 구축 등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 진전 및 디지털 분야 협력 강화

④ (호주·뉴질랜드) 호·뉴의 풍부한 수소생산역량과 우리의 수소활용 기술(수소차, 연료전지 등)간 시너지 증진 등 수소경제 협력 강화

* 한-호주 자원협력위·경제공동위, 한-뉴질랜드 FTA공동위원회·경제공동위 등 활용

⑤ (중남미) 인프라·개발협력* 등과 함께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 메르코수르 TA 협상 가속화 등** 통해 신흥시장 진출기반 마련

* '21~'24년 중미 북부 3개국(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대상 유무상 ODA 2.2억불 지원

** (태평양동맹) 멕시코·칠레·페루·콜롬비아 등 지역연합(준회원국 가입 협상 개시 추진중)
(메르코수르) 브라질·아르헨티나·우루과이·파라과이 4개국간 관세동맹('21.8월 7차협상 진행)

⑥ (아프리카) 주요 4개국*과의 EDCF 기본약정 체결, 케냐(콘자 테크노폴리스 스마트시티화) 신규 EIPP 1차년도 사업추진('21-'22년)

* 권역별 거점국가: (서부) 가나, 세네갈 (동부) 케냐, 탄자니아

- ◆ **글로벌 공급망 교란**(반도체 부족, 물류 차질 등)과 **공급망 재편**(자국·동맹국 중심) 대응
 - **양자다자 협의** 활성화 및 **핵심품목 맞춤형 수급관리** 등 **리스크 대응**
- ◆ **기술패권 경쟁** 대응을 위해 **전략적 핵심기술을 육성·보호**하고, **기술표준 선점** 및 **국제표준화 주도**
- ◆ **디지털·환경·노동** 분야 **新 통상이슈** 대응 및 **대외협력 강화**

1.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① (대외적 노력) 공급망 논의 선제적 대비 및 협력국 다양화

- ① **(다자채널)** 글로벌 공급망 장관회의('22년 중반),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 등 관련, 협력의제·우려사항* 분석 등 선제적 대비

* 예: 인권·노동·환경규범 강화, 민간 정보공유 확대 요구, 외교적 민감사안 등

- ② **(양자채널)** 美측과의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을 지속하되, 豪·아세안 등과의 협력도 확대하고, 中측과 지속적 소통 유지

- (對美) 품목별 협의채널* 지속 운영 및 美 6대 산업 공급망 보고서(국방·보건·IT·에너지·운송·농산물, '22.2월 발표 예정) 관련 긴밀 협력

* (반도체·핵심광물) 韓산업부-美상무·국방부, (의약품) 韓복지부-美보건부

- (對中) 산업장관회의('22.1.25), 경제장관회의*, 경제공동위(차관급) 등을 통해 양국 정부 간 소통 지속

* 경제장관회의(韓기재부-中발개위), 산업장관회의(산업부-공신부), 경제공동위(외교부-상무부)

2 (대내적 노력) 공급망 대응역량 강화 및 추진기반 마련

① (위험요인 점검) 위기징후 조기파악 및 신속대응을 위해 특정국 의존도 높은 4,000여개 품목*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 특정국에 수입 50% 이상을 의존하거나, 추가적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점검이 필요한 4,000여개 대상품목 既 선정('21.12월)

- 해외동향(재외공관, KOTRA 등)과 국내동향(업체·수입동향, 전문가 의견 등)을 주기적·체계적으로 점검하여 이상징후 조기 파악
- 상시점검을 통한 조기 이상징후 포착 및 적시대응을 위해 조기경보시스템 자동화 및 고도화 추진

② (위기 대응력 강화) 既 선정된 200개 경제안보 핵심품목*에 대해 품목특성을 감안한 메뉴판式 맞춤형 수급관리 추진

* ①국내경제 영향, ②대외의존도, ③시급성, ④수입선 전환 또는 국내생산 가능성 등 종합 고려

- 요소수 대응경험을 바탕으로 핵심품목에 대한 위기관리매뉴얼을 마련하고 수급불안시 신속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
- 주력산업 연관도가 높은 20대 우선관리품목은 비축확대, 장기 공급선 확보 등 既 마련된 수급안정화방안 시행
- 여타 180개 핵심품목은 중장기적으로 공급망 위기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한 수급안정화방안을 소관부처별로 구체화

③ (추진기반 강화) 공급망 리스크 점검·예방 및 위기관리를 위해 면밀한 추진체계 및 제도적 기반 마련

-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 산하에 「경제안보 핵심품목 TF」를 운영하고, 분야별 작업반을 통한 동향 밀착점검 및 관리
-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운영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공급망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조직(가칭 경제안보 공급망 기획단)을 신설

2. 기술패권 경쟁 下 우리 기술 육성·보호

1 전략적 핵심기술 육성 전략 고도화

○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글로벌 패권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안보 관점에서 핵심적인 기술을 선정하고 육성 전략 고도화

→ 공급망 안정 및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전략기술'과 미래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필수전략기술'의 Two-Track 전략 추진

* 同기술은 산업기술보호법 상 '국가핵심기술'로도 지정·연계하여 기술인력 체계적 보호

▪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22.下)에 따른 첨단전략기술 선정 및 생산시설·R&D 투자 확대를 위해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

* 특화단지 지정 및 기반시설 지원, 핵심인력 양성체계(계약학과, 특성화대학 등) 확충 등

▪ 10대 국가필수전략기술('21.12월 발표) 분야별 세부중점기술을 선정하고 기술별 R&D 로드맵 마련('22.上) 및 맞춤형 전략* 마련 추진

* (선도형)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5G·6G → 민간혁신 활동 집중 지원

(경쟁형) AI, 첨단로봇제조, 수소, 사이버보안 → 도전적 연구개발로 신속한 기술확보

(추격형)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 공공주도의 개방협력축적 기조로 중장기적 육성

< 필수전략기술 관련 가용 정책수단(예시) >

	추격형	→	경쟁형	→	선도형
① R&D투자 및 인력양성	✓ 도전적 목표 달성 연구개발(미DARPA) 본격화				
	✓ 출연(연) 등 장기 연구 거점		✓ 기업수요 전문인력 공급 및 사업화 지원		
② 기업 혁신 활동 지원	✓ 혁신조달(신기술인증)/창업지원		✓ 기업R&D/설비투자 강력한 조세지원		
			✓ 실증·사업화 인프라	✓ 선제적 규제개선	
③ 민군협력	✓ 군-산학연 민군기술협력 지원		✓ 민간의 국방연구개발 참여 촉진		
④ 특허·표준지원	✓ 원천특허 및 국제표준 선점 지원		✓ 특허분쟁 시 우리기업 보호		
⑤ 통상지원강화	✓ 디지털규범 선도 지원		✓ 공급망 안정화 조치		
⑥ 기술보호	✓ 연구보안 강화		✓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보호(수출통제, 핵심인력관리 등)		
⑦ 국제협력·공조	✓ 주요국과 개방형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		✓ 협력 지렛대로 우위기술 활용		

2 핵심기술·인력 보호를 위한 범부처 협업 및 보호체계 강화

1 (범부처 협업 강화) 핵심기술·인력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범부처 기술안보 정책 연계 강화 및 역량 결집*

* 산업부·중기부·특허청·방사청은 부처별 기술보호 중장기계획을 공동발표하고, 통합적 전략 마련('글로벌 기술패권 경쟁下 우리기술 보호 전략', '21.12.23)

산업부	중기부	특허청	방사청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 (‘22~24, 3년)	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계획 (‘22~24, 3년)	부정경쟁방지등에 관한 기본계획 (‘22~26, 5년)	방위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 (‘22~26, 5년)

2 (보호체계 강화) 보호대상 핵심기술 지정 확대, 보안역량 강화 등 선제적 보호시스템 보완·체계화

- 국가 전략적 핵심기술(첨단전략기술, 필수전략기술 등)을 중심으로 (R&D)보안과제* 및 (성과물)국가핵심기술** 지정 확대

* 국가안보 등을 위해 보안이 필요한 연구개발과제(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유출 시 국가안보 및 경제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산업기술보호법)

- 국가 R&D 보안역량 강화를 위해 보안과제 수행기관에 대해 보안과제 실태점검 및 보안컨설팅 지원*

* 연구성과물 관련 보호 필요사항 도출(산업부), 비밀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한 대학·공공연 대상 심화컨설팅 및 관리소프트웨어 구축 등 지원(특허청)

-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해외 M&A 진행시 정부허가 대상인 외국인 및 M&A 범위 확대

(외국인)	▶ (현행) 통상적 개념의 외국인 → (개선) 이중국적자, 외국자본 사모펀드, 외국인이 지배하는 내국법인 추가
(M&A)	▶ (현행) 주식·지분 50%이상 직접소유 → (개선) 주식·지분 30%이상 직접소유 또는 간접소유(모회사·자회사 등을 통한 영향력 보유)

-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제 도입, 국가핵심기술 전문 인력 DB 구축* 등 기술·인력 보호 시스템 마련

* '22년은 업계 요청인력(개인정보 제공동의를 받은 이직제한 필요인력)에 대해 우선 시행

3 기술표준화 대응을 위한 국제표준 협력 강화

① (표준선점) 디지털, 탄소중립, K-방역 등 보건, 서비스 등 분야 핵심기술을 중심으로 표준 선점 및 국제표준화 리드

- * ① (디지털 등) 전기·자율차, 스마트제조, 반도체·AI, 5G, 빅데이터 등 표준 300종 제안(~'23)
- ② (탄소중립) 탄소발자국 산정방법, 신재생에너지 등 100종 표준 개발(~'50)
- ③ (보건) K-방역 관련 감염병 검사·추적·치료에 대한 국제표준 18종 제안(~'22)
- ④ (서비스) 유망서비스, 생활서비스, 사회안전서비스 등 100종 표준 개발(~'25)

② (표준협력) 주요국과 AI, 미래차 등 핵심 분야 표준 공동개발 등 협력채널을 본격화*하고 신흥국 대상 한국형 표준 전수 추진**

- * 제1차 한미 표준협력대화 출범('21.12월), 제2차 한독 표준협력대화('21.11월)
- ** 한-아세안 표준연구센터 설립 추진, 우즈베크·인나·베트남 등 ODA 중점협력국 표준 체계 지원 확대('22년)

③ (글로벌 리더십 확대) 글로벌 표준기구 고위급 리더직 수임 확대* 및 OECD, G7, G20에서 추진되는 표준 논의에도 적극 참여

- * 통신기술 표준을 주도하는 ITU 선거('22.10월)에서 우리 인사(現 ITU 표준화 총국장) 사무차장 진출 지원

4 주요국과의 전략적 국제협력 추진

○ 美·EU 등 기술강국과 경제안보·산업·통상·과학기술 등 포괄적 논의가 가능한 채널 확대

▪ (미국) 고위급 경제협의체(외교부-美 국무부) 및 美 통상당국과의 협의채널*(산업부-美 USTR)을 운영하고 한미 과기공동위 강화 추진**

- * 산업부-USTR간 공급망 관련 '강화된 협의채널을 통한 새로운 접근 개시' 합의('21.11)
- ** 한미 정상회담('21.5) 계기 과기공동위를 정부·민간채널까지 아우르는 종합채널로 확대·강화, 6G·양자 등 공동연구 추진 등 합의

▪ (EU) 선도기술을 보유한 유럽 각국과 분야별 협력*을 강화하고, 'Horizon Europe'** 프로그램 준회원국 참여 본격 협의 추진

- * (예) 독일(첨단소재), 프랑스(원전해체), 네덜란드(반도체 노광), 노르웨이(수소)
- ** EU·대학·기업 중심으로 혁신적 연구개발에 '21~'27년간 129조원 지원

3. 디지털·환경·노동 기준 강화 대응 및 대외협력

1 디지털 통상 관련 국내제도 선진화 및 글로벌 규범 정립 선도

① (국내 제도) 데이터 활용·보호, 공정경쟁 환경 조성 추진

- 데이터 활용도 제고, 민감정보 보호를 위한 국내제도 개선 방향 모색
- 통상규범 정합성을 명료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국외이전 요건을 다양화*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마무리('22년)
 - * 당사자 동의 없이도 적절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보장되는 국가기업으로의 국외이전 허용
- 높은 수준의 협정 체결 가능성에 대비해 해외 소재 클라우드에 대한 금융당국 감독권 확보방안 등 연구 추진
- 플랫폼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공정경쟁 환경 조성
- EU의 디지털시장법·디지털서비스법, 미국의 플랫폼 반독점법 등 규제 동향을 모니터링하며 공정생태계 구축*을 위한 환경 조성
 - * 온라인플랫폼의 알고리즘 조작, 자사상품 우대 등 불공정거래 행위 방지 등

② (국제 논의) 국익 반영 위해 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 선도

- 협력시 상호보완 효과를 낼 수 있는 국가와 양자·복수국 협정을 추진하여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확대
-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 발효를 위한 서명('22.上),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협상 타결('22년) 추진
 - * Korea-Singapore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 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협정('21.12월 타결)
 - ** 디지털분야 협력 강화 위해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3개국이 체결한 협정('21.1월 발효)
- 우리 입장 반영을 위해 WTO 전자상거래 협상*에 적극 참여하며 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 선도
 - * 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 마련을 위해 '19.5월 협상 개시 이후 86개국 참여중

2 디지털세 도입을 위한 국제논의 참여 및 다자협정 체결

- ① (이행계획 논의)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141개국)를 통해 필라1·2 세부사항 논의 및 시행을 위한 입법 지침·주석서 마련
 - 유관 부처·업계·전문가와 긴밀히 협조하며 의견 수렴 및 협의 진행, 국제논의 속도에 맞추어 국내 개정입법 등 제도화 추진
- ② (다자협정 준비) 포괄적 이행체계 논의에 참여하여 디지털세 도입을 위한 다자협정 체결, 고위급 서명식 진행('22년 중반)
 - 필라1 Amount A* 도입을 위한 다자협정을 체결하고, 필라2 원천지국 과세규칙**도 별도의 다자협정을 연내 마련
 - * 필라1 Amount A : 매출발생국에 과세권 배분
 - ** 필라2 원천지국 과세규칙 : 대외 지급금에 대한 원천지국의 과세권 확보

3 탄소국경조정(CBAM)*, ESG 법제화 등 글로벌 환경기준 강화 대응

* 高탄소산업이 低규제국가로 탄소 배출을 이전 못하도록 경제적 부담 부과(EU, '21.7월 발표)

- ① (국제 논의) 주요국의 CBAM*, ESG** 등 관련 동향 모니터링
 - * (주요국 동향) ①對EU 협의, ②WTO 제소 및 보복 대응, ③유사제도 도입 관련 동향
 - ** (美) ESG 관련 공시 의무화(ESG Disclosure Simplification Act, '21.6월 하원 통과)
 - ①CBAM의 WTO 합치, ②무역장벽화 방지, ③투명성 제고, ④우리 탄소저감 제도의 충분한 반영에 중점을 두고 EU와 협의*
 - * 관계부처 공동 정부의견서 EU 제출('21.11.17), 한-EU 공동 EU CBAM 인포세션 개최('21.12.16), 추가 질의서 제출('22.1월) 등을 통해 EU측과 지속 협의중- ESG 공시 관련 국제기준* 마련 논의에도 적극 참여

*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21.11.3 출범), '22.6월 초안 발표 후 '22.下 확정 예정

- ② (국내 제도) 탄소함유량 측정 관련 인증기관 육성, 국제상호 인정체계 가입분야 확대 등 탄소배출 측정·검증 인프라 구축
- 탄소가격 부과체계 연구용역 결과('22.3월)를 토대로 배출권 거래제·세제 등 탄소가격체계 종합적 검토
 - K-ESG 가이드라인('21.12 발표) 활용 확대, ESG 컨설팅·공급망 실사 지원 등 국내 기업 대상 ESG 경영 확산 지원도 실시

4 국제적 노동 규범과 통상정책 간 연계 강화에 선제적 대응

- ① (국제 협력) 美*·EU** 등 주요국 노동 규범·정책 강화에 대한 선제대응 위해 韓美 FTA 노무위원회 조기 개최('22초, 잠정) 추진

* (美) ①무역협정(USMCA 등), ②다자 협의체(인태경제프레임워크 등), ③수입제한조치(강제 노동 생산품 등) 등을 통해 노동 중심 정책 강화 및 제3국의 노동권 강화 요구

** (EU) ①FTA 체결·비준·이행시 ILO 협약 비준 등 노동권 준수, ②對中 투자협정 체결시 노동권 신장 등 요구

- ② (국내 지원) 우리 기업들의 현지 노동법령 준수 지원, ILO 핵심협약*('22.4월 발효 예정) 이행 등 국제 노동기준 준수에 만전

* ①결사의자유·단결권보장협약(87호), ②단결권·단체교섭권협약(98호), ③강제노동협약(29호)

- 종합안내서(22개국, 현지 법제·노동시장 현황 등) 발간, 해외 진출 기업 대상 현지 세미나 개최 등 기업 지원

* 종합안내서(22개국, 현지 법제·노동시장 현황 등) 발간 해외 진출기업 대상 현지 세미나 개최 등(고용부)

- ◆ 개도국 수요를 감안하여 **그린·디지털·보건 분야 ODA**를 확대하고, **파트너십 강화, 개발금융 외연 확장** 등을 통해 **개발협력 경쟁력 확보**
- ◆ G20, ASEAN+3 등 **국제회의** 논의 주도, **국제금융기구** 협력 확대

1. 국제개발협력 강화

① **그린·디지털 전환, 의료체계 개선 등 개도국 맞춤형 ODA 확대**

- 개도국 수요가 큰 그린·디지털·보건 분야에서 총 21억불 규모의 EDCF 지원 추진

* EDCF 승인 목표 (2021 → 2022년, 억불) : (그린)3 → 8 (디지털)5 → 6 (보건)6 → 7

- **(그린 ODA)** 개도국 기후적응 요구 증가를 감안, **교통시스템·수자원 등 우리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을 대폭 확대**
 - 또한, EDCF 사업의 **기후위험 관리 및 기후성과 평가를 강화** 하기 위해 모든 사업에 대한 **기후대응요소 내재화***를 추진
- * 기후위험 사전 분석 → 위험경감 방안 수립 → 이행 점검 → 기후성과 평가 체계 구축 ('22년중 시범사업 실시)
- **(디지털 ODA)** 우리 기업의 ICT 경쟁력을 활용하여 **한국형 전자정부 도입, 중소득국 SOC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
 - 지원의 지속성·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상(인프라 건립) + 무상(교육훈련·콘텐츠 개발) 합동 진출 확대**
- **(보건 ODA)** 코로나19로 취약성이 드러난 개도국 **보건·의료 분야 개선**을 지원
 - 특히, 수원국 수요와 우리 기업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백신·방역·의료시스템 분야**의 사업을 기획·발굴

2 EDCF 지원방식 다변화 및 규모 대형화를 통한 개발효과성 제고

① (지원방식 다변화) 구축성 개발사업 중심 지원에서 비구속성 지원*, 프로그램 차관 지원** 등으로 사업의 외연 확장

* 사업 재화·용역 조달의 참여 자격을 특정 국적의 기업으로만 제한하지 않는 방식

** 개도국 국가개발계획(정책 프로그램)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차관 형태로 지원

- '25년까지 유상 ODA 비구속성 지원 비중을 60%까지 확대*

* 국별 유상 ODA 비구속성 비율('19년 기준, %) : (英)100 (獨)100 (佛)98 (日)67 (韓)47

- MDB·수원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개도국 탄소 감축·보전 시스템 개선 등 사회 인프라 관련 프로그램 차관을 적극 발굴

② (규모 대형화) 개도국 인프라 개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복합금융 등을 통한 대형 랜드마크 사업 발굴을 추진

- 대형 후보사업 풀(pool) 확보를 위해 F/A 규모를 확대*하고, EDPF**·수출금융 등을 결합한 PPP 사업 발굴 노력 지속

* 현재 총 15개국(아시아 10개국, 아프리카 4개국, CIS 1개국)과 EDCF F/A가 체결되어 있으며, 인도·세네갈 2개국과 신규 F/A 체결 협의중

** 경제협력증진자금 : 수은 재원으로 대출소요비용보다 낮은 금리로 개도국을 지원하고, 조달-지원 금리간 차이를 정부재원으로 보전(상업성 있는 사업에도 지원 가능)

3 글로벌 인프라 협력 경쟁 확대에 대응한 개발협력 파트너십 강화

① (대외 협력 확대) 공동·대형 인프라 사업 참여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EDCF-MDB 협력 대상·규모·방식 확대

* ①(대상) 기존 5개 MDB 협력 중 → EBRD, AIIB와 신규 협력 추진(+2개)

②(규모) 협조융자 기한 도래 및 한도(총 24억불) 소진 시 적극 갱신·증액 추진

③(방식) 민간사업 지원 등 신규 협력방식 추진 등

- 기존 주요국 협력 채널*, EDCF-해외공여기관 간 협의체 신설 등을 통해 양자 인프라 협력 점점 확대

* (예시) 한-미 인프라 민관 라운드테이블, 한-미 인프라 워킹그룹, 한-중 경제장관회의 등

② (글로벌 이니셔티브* 대응) 향후 전략적 파트너십에 대비하여 EDCF 협력·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대외 공조 노력 강화

* QII(양질의 인프라 투자 원칙, G20), B3W, BDN(이상 美), Global Gateway(EU) 등

- 글로벌 인프라 투자 기준(개방성·포용성 등)에 부합하도록 EDCF의 사업 검토·관리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4 개발금융 외연 확장을 통한 개발협력 경쟁력 향상

- ① **(개발금융기능 강화)** 개도국 민간투자 지원, 선진금융기법 활용 등을 위해 선진국 DFI에 상응하는 개발금융기능 마련 추진
 - 개도국 민간 인프라에 개발금융을 지원함으로써 정부 간 협력(G2G 협력) 중심의 現 EDCF 기능 보완
 - 지분투자, 융자, 보증, 메자닌 등 다양한 개발금융기법을 활용하여 금융 규모 및 지원 스펙트럼 확대
- ② **(해외 DFI 협업채널 발굴)** 선진국과의 새로운 경제협력수단 확보 및 전략적 중요국가 진출을 위해 해외 DFI와의 협력 강화*
 - * 美DFC-^{EU}EDFI-^加FinDev는 'DFI Alliance'를 결성('19.4월), 사업발굴·투자 등 활발히 협력 중
 - 美DFC와 인도·아세안 공동 지원사업 발굴 등 신남방정책과 美인태전략 간 연계에 기반한 韓美 협력채널 확장 도모

2. 다자국제금융기구 협력

1 국제회의의 주도적 참여 및 역할 제고

- ① **(G20)** 거시경제공조, 기후변화 대응 등 주요 현안에 국익 차원에서 대응, 국제금융체제 공동의장국(韓·佛)으로 리더십 발휘
 - 세계경제 동향에 대한 G20 회원국, 국제기구 입장을 모니터링 하고, 질서 있는 거시정책 정상화*를 위한 공조노력 강화
 - * 성급한 정상화는 회복 모멘텀 저해, 정상화 지체는 중장기 생산성 저해
 - 탄소세 도입 관련, 탄소세·배출권거래제 등 가격수단 및 규제·보조금 등 비가격수단을 망라한 최적정책 조합 중요성 강조
 - 채무재조정 절차 개선으로 저소득국 채무부담 완화를 가속화*하고, 선진국 배분 IMF SDR을 활용한 취약국 지원방안 구체화**
 - * 저소득국 채무재조정 Framework를 마련하고, 차드, 에티오피아, 잠비아 등 3개국에 대한 채무재조정을 추진 중이나 절차 지연 중
 - ** '21.8월 배분을 완료한 6,500억불 규모 IMF SDR 중 선진국 배분 SDR을 IMF 기금에 공여하여 중·저소득국의 기후변화 대응 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논의 중

② (ASEAN+3) 역내 금융안전망 강화 및 기후변화 등 신규과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역내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공조 강화

- CMIM 공여통화를 달러 外 역내통화로 확대*하는 제도개선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역내금융안전망 대응역량 제고에 기여

*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sation: ASEAN+3 역내 회원국 위기시 유동성 지원을 위한 다자간 통화스왑으로 공여통화를 달러 外 역내통화로 확대 추진

- 기후변화, 디지털화폐, 지역공급망 등 신규과제*를 중심으로 AMRO**의 경제점검역량 강화 및 역내 금융협력 확대 노력

* '22년 공동의장국(中·캄보디아)이 역내공조 강화 차원에서 주요의제로 제안

** 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 역내 거시경제 조사기구

- 핀테크 워킹그룹*의 주도국으로서 오픈뱅킹 도입지원 등 역내 핀테크 발전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 협력방안 마련

* 역내 협력과제 논의 위한 4개 워킹그룹 구성('21), 아국은 핀테크 워킹그룹 주도국(①인프라금융(싱), ②구조적이슈 대응(中), ③재해금융(日), ④핀테크(韓))

③ (OECD) 기후변화·디지털 경제 등 새로운 글로벌 도전 과제 해결을 위해 우리 대응경험 공유 등 논의에 적극 참여

- OECD 동남아 프로그램(SEARP)* 개최('22.2월) 등을 활용, 신남방지역 디지털 전환·녹색 회복을 위한 국제협력 주도

* 동남아 국가들의 OECD 가입 촉진을 위해 출범('14년), 우리나라는 동 프로그램 공동 의장국('18~'22년, 한국·태국)으로서, 금년 서울에서 각료회의 개최

④ (APEC) 아태지역 내 인적교류 정상화 및 역내 공급망 강화 논의 주도를 통해 경제회복 가속화 도모

* APEC 2022 주제: 개방, 연결, 균형(Open, Connect, Balance)

- APEC 재무장관회의(10.19~21), APEC 정상회의(11월) 등 개최 예정

② 국제금융기구 협력을 통한 우리기업·인력 진출 확대

① (WB) 디지털·인프라 등 한국 강점 분야에 대한 협력 강화 및 한국기업·인력의 해외진출 적극 지원

- 디지털·인프라 등 주요 분야에 대한 한-WB 협력 강화를 위해 '22년 종료되는 한-WB 협력기금*(KWPF) 출연 재약정

* 개도국의 경제성장 지원과 한-WB 협력 강화를 위해 설립한 기금으로 사업 준비, 공동연구, 사전 타당성 조사 등 지원('12.10월 MOU 체결)

- 디지털 기반 혁신기술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혁신기술 허브로서 출범('21.7월, 3기)한 WBG 한국사무소의 인력 및 사업 확대*

* (인력) 3기 한국사무소부터 혁신, 기술, 녹색분야 등 인력 보강(+5명, 총 29명)
(사업) 동아태 혁신기술 랩 신설을 통해 혁신기술 활용 사업 등 지원('21-'23년간, 300만불)

- 국제개발협력 20차 재원보충 분담률 확대* 계기, 한국기업·인력의 WB 진출 지원을 위한 사업설명회 개최(2월말), 채용미션(7월) 추진

* 분담률 1.5%(IDA19 대비 +0.1%p, 5,848억원) 재원보충('23~) 약정('21.12월)

② (ADB) 보건시스템 구축, 벤처·조세 협력 등 역내 개도국의 지속가능성장 지원을 통해 역내 핵심국가로서의 리더십 강화

- 역내 개도국의 백신생산 역량 강화를 위해 ADB와 공동으로 아태 백신 생산인력 교육과정* 개설('22.上, 송도)

* 한국의 백신·바이오의약품 인력 교육훈련 사업인 K-나이버트(NIBRT)에 ADB가 참여, 역내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국제 커리큘럼 공동 개설

- ADB '아태 조세허브*'와 OECD 한국조세센터를 연계, 고위급 조세 컨퍼런스 국내 개최 등 역내 조세협력에 적극 참여

* ADB가 코로나 이후 성장에 필요한 재정적 기반 구축 지원을 위해 출범한 역내 조세협력 이니셔티브로, 우리나라는 창립멤버로서 참여중

- 역내 혁신성장에 기여하는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ADB 벤처 펀드* 2단계('22~) 참여 검토, 국내 IR 개최 등 추진

* 청정기술, 핀테크, 보건 등 분야 역내 벤처기업에 투자('20년 출범, 총 6천만불) 하기 위해 ADB가 출범시킨 펀드로, 1단계('20년~)에 아국 15백만불 既투자

③ (IMF) 저소득국 등 지원 및 자본시장 변동성 대응을 위한 IMF 주요 이슈에 적극참여 하고 우리나라 입장 반영

- 저소득국 빈곤감축기금(PRGT), 회복·지속가능성기금(RST) 등 취약국 지원을 위한 SDR 활용방안* 모색 및 참여

* Poverty Reduction and Growth Trust : 저소득국 빈곤완화 목적의 단기 무이자 대출
Resilience and Sustainability Trust : 취약국 대상 구조개혁 목적의 장기 저리 대출

- 한-IMF 기술협력기금(KSA)을 통해 코로나 대응, 재무행정·세정 등 취약국의 역량강화* 지원

* 예 : 코로나 위기대응 역량개발 이니셔티브(CCCDI), 세수확보신탁기금(RMFT), 자금세탁 및 테러방지 기금Ⅲ(AML-CFT Ⅲ), 중앙아시아지역 역량개발센터

- 자본유출입 관리에 대한 IMF 공식입장(IV*) 재검토 시 전통적 거시정책 외 다양한 자본이동관리 수단을 고려**토록 의견 반영

* Institutional View on the Liberalization and Management of Capital Flows(‘12년) : 자본유출입 대응에 전통적 거시정책 활용, 예외적으로 자본이동관리조치 허용

** 자본이동관리조치(예 : 선물환포지션) 등을 선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신흥국 등이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보완

④ (지역별 MDB) 지역별 기업진출 확대를 위해 고위급 협의체 운영, 한국사무소 개소 등 對MDB 네트워크 강화

- (IDB) 제6회 한-중남미 비즈니스 서밋* 개최(‘22.下, 서울) 계기 기업 간 네트워크 형성 및 아국기업 중남미 진출 지원

* 한-중남미 경제협력을 위해 韓-IDB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대규모 정례행사로 중남미 고위관료 및 기업 CEO 등 참석(‘07, ‘11, ‘15, ‘17, ‘19년 개최)

- 중남미 보건시스템 구축 등 회복력 강화 사업 추진을 위해 신탁기금(재정혁신협력기금) 추가 출연(‘22~’26년간 2천만불)

- (CABEI*) 한국사무소를 개소(서울)하고 동 계기, CABEI 이사회, 기업 간담회 등 한-중미 경제협력 행사 개최

* 우리나라는 15개 영구이사국 중 하나로, 역외국 중 지분을 2위(9%)

- (AfDB) 제7차 한-아프리카 경제협력(KOAFEC) 장관급 회의* 개최(‘22.下, 서울), 아프리카개발기금 16차 재원보충(‘23~’25) 논의 참여

* 한-아프리카 경제협력을 위해 韓-AfDB가 격년 주기로 공동 개최하는 행사(‘06~)

- (EBRD) 기후분야 협력사업 확대를 위해 신탁기금 사업발굴 강화 및 기후행동 특별기금* 참여

* 기후환경 부문 중심 수원국 지속가능성장을 지원하는 EBRD內 신규 다자기금

- (AIIB) 우리기업·금융기관 대상 AIIB 투자사업 세미나 개최(연 2회)

3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논의 적극 참여

① (다자논의 선도) G20, UNFCCC 등 다자협의를 통해 탄소 가격제, 녹색분류체계 등 관련 분야 국제 논의 적극 참여

- 특히, 재무장관 회의체인 기후행동재무장관연합*의 주요 논의** 참여를 통해서 재무트랙 차원의 국제 협력 확대

* The Coalition of Finance Ministers for Climate Action: 기후행동 촉진을 위한 재무장관 간 협의체로 '19.4월 설립, 총 67개 국가 가입(한국 '21.4월 가입)

** 주요 논의 의제: 파리협정에 부합하는 정책, 효과적 탄소가격제 달성, 재정 계획에 기후변화 요소 반영, 금융 촉진, NDC 수립·이행 참여 등

② (기후재원 기여 확대) GCF·AF 이사국*으로 기후재원을 통한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논의 적극 참여

*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4기('22~'24년) 이사진 진출
적응기금(Adaptation Fund): '20년부터 '22년까지 이사직 수임

- 국제사회의 적응재원 확대*에 동참 위해 AF 신규 공여를 검토, '22년 시작 예정인 GCF 2차 재원보충** 논의 주도

* '21.11월 COP26 계기 선진국은 개도국을 위한 적응재원을 '25년까지 '19년 대비 최소 2배 확대하기로 합의

** 1차 재원보충 시 '20~'23년 99억불 공여 약정, '24~'27년 2차 재원보충 예정
한국은 초기재원 1억불, 1차 재원보충 2억불 공여 약정 → 총 3억불 공여

③ (우리기관의 해외 진출) GCF·GGGI 등 국제기구 활용, 우수 역량을 갖춘 우리기관의 해외 기후대응 사업 진출 지원

- GCF 사업발굴 TF*를 통해 우리 기관의 GCF 사업 진출 방안을 논의하고 우리나라 GCF 인증기구** 확대 추진

* (목적) GCF 후보사업 공유 및 협조 방안, 향후 추진 계획 점검
(참석 기관) 기재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및 산은, 수은, KOICA 등 관련기관

** GCF는 역량 있는 기관을 인증기구로 승인하고 이들을 통해 개도국 사업 수행·관리, '22.1월 기준 우리나라 인증기구는 산은, KOICA 2개 기관

- '22년 신설된 GGGI 신탁기금*, UNFCCC 수요기반 기후재원 프로젝트** 등을 통해 우리 기관의 해외 진출 지원

* 개도국의 기후대응 사업개발 지원을 위한 기금('22~'26년 연간 60억원 출연)

** 개도국의 기후분야 후보 사업 발굴 등을 지원('22~'24년 연간 10억원 출연)

- ◆ 대외 불안요인에 대응해 **모니터링** 및 **시장안정** 노력을 강화하고, **해외투자자와의 적극 소통** 등을 통해 **대외신인도 안정적 관리**
- ◆ **외환거래 참가자·규모 확대**, **거래방식 고도화** 등에 대응하여 **외환거래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MSCI 선진지수 편입** 추진

1. 대외신인도 제고

1 시장동향 모니터링 강화 및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 운영

- ① **(모니터링 강화)** 글로벌 인플레이, 통화정책 정상화, 中 성장둔화 등 리스크요인을 면밀 모니터링하고 시장안정 노력 강화

'22년 국제금융시장 관련 주요 리스크 요인	
① 통화정책 정상화	▶ 테이퍼링→금리인상→대차대조표 축소 순서로 정상화 가속화 ▶ 유동성 축소에 따른 자산가격 하락, 신흥국 자금유출 가능성
② 변이 바이러스	▶ 급격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어 주요국 의료체계 부담 가중
③ 공급 차질	▶ 원자재·노동력 부족 등이 지속되며 高인플레이 등 장기화 우려
④ 중국 성장 둔화	▶ 공동부유 등에 따른 규제강화*, 부동산 부문 위축 등이 성장 제약 * 共同富裕 선언(21.8월), Three red lines(부채조달 제한) 및 사교육 등 규제 강화
⑤ 지정학적 리스크	▶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등 러시아·유럽 갈등, 이란 핵 문제, 카자흐스탄 사태 등 리스크 상존

- 거시경제금융회의·외환건전성협의회(21.7월 신설)*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외환시장 및 외화유동성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 관계기관 부기관장(기재부 1차관 주재) 참석, 외환부문 거시건전성 및 대응방안 등 논의

** 국금센터가 운영중인 대외부문 조기경보시스템(EWS)을 토대로 위기발생시 기재부, 금융위, 한은, 금감원, 국금센터 등 관계기관 합동 일별 모니터링 등 실시

- ② **(외환시장 안정)** 주요통화의 움직임 및 국내 외환수급 여건을 상시 점검하고, 급격한 변동성 확대시 적기 시장안정조치 실시

③ (외환건전성 제도) 코로나 대응시 국내 외화유동성 지원을 위해
완화*했던 건전성 제도를 향후 시장여건 등 보아가며 정상화

- * ① 선물환포지션 (국내)40→50%, (외은)200→250%<시한 없음>
② 외화LCR 80→70%<'22.3월 시한>

▪ 「외화유동성 관리제도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21.1월)에 따라
시범 운영중인 非은행권 모니터링 지표*, 스트레스테스트** 본격 시행

- * ①외화자금 조달·소요 지표, ②외화자산 부채-갭 지표, ③외화조달-운용만기 지표
* 증권·보험 등 업권별 특성에 맞춘 위기상황을 가정해 외화유동성 과부족 점검

2 신평사 및 해외투자자 소통 등으로 대외신인도 제고

① (국가신용등급) 국제 신용평가사 연례협의를* 등을 통해 경제
회복, 선도경제 도약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공유

* '22년 연례협의: (무디스) 2월, (S&P) 하반기(잠정), (피치) 1월 既 실시

② (해외투자자 소통) 정기적 대면·비대면 한국경제설명회, 해외
설문, 주요현안 설명자료 배포 등 해외투자자·외신 등과 적극 소통

③ (외환보유액)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에 따른 시장변동
가능성에 대비, 외환보유액 안정운용 등으로 적정규모 유지

* '21.12월말 기준 4,631억불로, 사상 최고 수준 유지(21.11월말 기준 세계 9위)
IMF도 외부충격 대응에 적정한 수준으로 평가 (대외부문 평가보고서('21.7))

외환보유액 추이

(억불)	'08말	'09말	'11말	'13말	'15말	'16말	'17말	'18말	'19말	'20말	'21말
보유액	2,012	2,700	3,064	3,465	3,680	3,711	3,893	4,037	4,088	4,431	4,631
증감액	△610	688	148	195	44	31	182	144	51	343	200

▪ 외평채는 시장상황에 따라 발행여부 검토(국회승인 한도 10억불)

④ (대외채무 관리) 글로벌 유동성 축소에 대비, 외채 및 건전성
지표*의 안정 추세가 지속되도록 관리

* 과거 평균('10~'20년)/현재(%): (단기외채/총외채)30.7/26.9 (단기외채/보유액)36.4/35.5

* 단기외채비율('21.2/4, %): (터키)128 (아르헨)100 (말련)83 (남아공)53 (韓)39 (인나)35

2. 외환거래제도 선진화 및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

① 외환시장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한 질적·양적 성장 도모

① (전자거래) 수출입기업, 해외투자자 등이 전자플랫폼*을 통해 가격정보를 실시간 확인·주문·체결하는 전자거래 방식 본격 도입

* (현재) 고객이 은행에 전화주문 → (개선) 전용 플랫폼을 통해 직접 호가확인·주문

- 고객과의 전자거래 절차·리스크관리 등을 표준화*한데 이어, 은행 자율적으로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금년중 본격 시행**

* 시장참가자간 자율규범인 '서울외환시장 행동규범' 既개정·시행('21.12월)

** 국내 시중은행 중 한 곳은 시스템구축을 완료하고 전자거래를 시행중

② (선도은행) 양방향 외환거래를 통해 원/달러시장내 거래 활성화에 기여한 은행을 선도은행(FX Leading Bank)으로 지정, 인센티브 제공

- 선도은행 대상 정책자문·의견수렴 등을 위한 고위급 협의체를 구성·운영(1분기 중 Kick-off 회의 개최)하고, 외환건전성부담금 감면*

* 2월중 규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시행

② 외환시장 개선을 통해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

① (제도개선) 해외투자자 편의가 제고되도록 실질적 제도개선 추진

- 설문* 결과, 해외 금융기관들은 ①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가 불가능, ②외환시장 마감 후 환전 곤란 등을 불편사항**으로 제기

* '21.11~12월중 국내 투자가 많은 글로벌 투자기관 50여개 대상 불편사항 설문

** 現 국내 외환시장(은행간 도매시장)은 정부 인가를 받은 국내 금융기관만 참가 가능, 現 국내 외환시장은 09:00~15:30 중 개장

- 해외투자자 불편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도록 외환시장 개선 추진

< 시장접근성 확대 수준에 따른 대안 예시 >

- ① 해외 영업시간을 포괄할 수 있도록 국내 외환시장 개장시간 대폭 연장
- ② 개장시간 연장 + 해외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직접참여 허용
- ③ 해외 금융기관이 해외에서 원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외환규제 자유화

- 외환시장 안정 등 국내영향 최소화도 함께 감안하여, 국내외 의견수렴을 거쳐 대안 마련

② (추진전략) 국내외 전방위 소통 노력으로 편입 여건 조성

- 국내영향 최소화를 위해 국내 금융기관 의견수렴 시행 중 (1.24(월) 외환시장 참가자 자율협의체인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 논의)
- 우리 정부의 제도개선 의지와 개선 방향을 주요 글로벌 투자기관에 홍보* (1월말~2월)

* MSCI는 지수편입 여부 결정시 글로벌 투자기관의 평가를 중요하게 반영

- 국내외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최종 방안* 마련 후, MSCI와 본격 협의 추진 (2월~)

*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등 증시 관련 쟁점은 금융위 중심으로 대안 검토 후, MSCI와 협의 상황에 따라 탄력 대응

3 외환거래법령 전면 개편 추진

① (추진방향) 해외투자자의 원화거래 접근성 제고와 병행하여, 국내 개인·기업·금융기관의 외환거래 규제부담이 획기적 개선되도록 현행 외환법령체계의 전면적 개편 추진

* 과거 허가제 위주의 외국환관리법('62년)에서 신고제 중심의 외국환거래법체제('99년)로의 이행에 준하는 포괄적인 제도개혁방안(新외환법(가칭) 제정) 마련

- 급증하는 외환거래수요에 대응하여 현행 규제체계*를 효율화 하고, 거시건전성 모니터링 취지상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

* 현행 법규는 거래유형별 신고대상을 열거함에 따라 새로운 거래유형 발생시 대응이 어렵고, 유사성격 거래에 대한 상이한 규제 및 수백여개의 거래유형 등에 따라 일반 국민, 기업의 신고의무 준수에도 애로

- 금융기관의 외환업무 범위와 규제책임간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각 업권별 업무범위를 재검토*하고, 규제 합리화** 추진

* 업권별 취급가능한 외국환업무 범위가 상이하고, 취급기준이 모호하여 취급 가능여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함에 따라 취급기준의 일관성·명확성 제고

** 적법한 거래여부 확인 등 외국환은행의 과도한 부담 완화, 외국환업무취급 기관이 非은행·非금융회사까지 확대됨에 따라 야기된 규제차별 문제 해소 등

- '99년 외환거래법 제정 이후 변화된 금융환경을 반영하여, 여타 금융법령과의 정합성, 외국환법령·규정간 위임관계도 정비

② (추진일정) 「외환제도 개선 TF*」를 통해 시장수요를 폭넓게 청취 하고, 상반기중 종합적인 개편방향 수립('22년말 법률안 마련 목표)

* 한은·금감원·관세청·은행연 등 관련업계·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21.9월~)

VI. 향후 추진계획

- ◇ 「'22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 후속조치 차질 없이 이행
- ☞ 분야별 정책 추진실적은 연중 대외경제장관회의/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통해 점검해 나갈 예정('22.7월, 상반기 실적점검)

《 주요 정책과제 실행계획 》

추진과제	추진일정	주관부처
1. 新시장 창출 통한 경제회복 견인		
① FTA 네트워크 확대		
· CPTPP 가입신청	'21.4월	산업부
· RCEP 공동위원회 개최	'22.1분기	산업부
· 신규 FTA 체결 확대(신남방·신북방·중남미·중동 등)	연중	산업부
② 해외수주 지원		
· 수은-사우디 국영회사 간 기본여신약정(F/A) 체결	'22.上	기재부
· 수은 특별계정 2단계 추진	연중	기재부
· 수은 대외채무보증 제한 완화(수은법 시행령 개정)	'22.上	기재부
· 제2차 한미 인프라 민관 라운드테이블 개최	'22.上	기재부
③ 양자 경제협력 고도화		
· 한-중 경제장관회의 개최	'22.上	기재부
·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	'22.上	기재부
· 한-우즈베크 경제부총리회의 개최	'22.上	기재부
· 한-베트남 보건장관회의 개최	'22.上	복지부
· 한-베트남 경제부총리회의 개최	'22.上	기재부
· 한-UAE 경제공동위 개최	'22.下	기재부
2. 새로운 대외경제질서 대응		
①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 경제안보 핵심품목에 대하여 위기관리 매뉴얼 및 수급안정화 방안 구체화, 조기경보시스템(EWS) 고도화	연중	기재부
· (가칭)경제안보 공급망 기획단 신설	'22.上	기재부

추진과제	추진일정	주관부처
㉔ 기술패권 하 우리 기술 육성·보호		
· 국가필수전략기술 R&D 로드맵 마련	'22.上	과기부
· 기술표준화 대응 및 전략적 국제협력	연중	산업부 과기부
㉕ 디지털·그린 대외협력 확대		
·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협상 타결 추진	'22.下	산업부
· 디지털세 국제논의 참여 및 다자협정 체결	연중	기재부
3. 국제협력 강화 통한 국익 제고		
① 국제개발협력 강화		
· 그린·디지털·보건 ODA 확대	연중	기재부 외교부
· EDCF-MDB 협력 확대	연중	기재부
· 개발금융기능 강화	연중	기재부
㉔ 다자·국제금융기구 협력		
· 한-중남미 비즈니스 서밋 개최	'22.下	기재부
· CABI 한국사무소 개소	연중	기재부
· KOAFEC 장관급회의 개최	'22.下	기재부
4. 국제금융 인프라 강화		
① 대외신인도 안정성 제고		
· 국제금융시장 동향 및 리스크요인 모니터링	연중	기재부
· Moody's 연례협의	'22.2월	기재부
· S&P 및 Fitch 연례협의	'22.下	기재부
· 해외투자자 대상 한국경제설명회	'22.下	기재부
㉔ 외환거래체계 개편 및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		
· 외환시장 전자거래 본격 시행	'22.下	기재부
· 외환시장 선도은행과의 협의체 구성·운영	'22.上	기재부
·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	'22.上	기재부
· 외환거래체계 개편방향 내부초안 마련	'22.上	기재부